

## WEEKLY REPORT

## KMI 동향분석

VOL.16

2017 FEBRUARY

발간년월 2017년 2월(통권 제16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윤성순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장

(ssyoon@kmi.re.kr/051-797-4711)

이정삼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장

(jslee@kmi.re.kr/051-797-4551)

최근 남해 EEZ 골재채취를 둘러싸고 어업인과 개발자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다모래는 국내 모래골재 공급원의 34.4%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는데,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해 모래 수급만을 우선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사용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대체골재 개발이나 환경회복 등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해역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멸치, 오징어, 고등어의 산란장으로 알려져 있고,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부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조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해당사자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바다 환경과 수산자원 훼손을 판단할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대책 사업용 채취를 목적으로 지정했던 단지에서 민수용 모래채취가 90%에 육박할 정도로 목적이 변형되었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복구를 고려하지 않고 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반복하면서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었다. 게다가 지금의 바다모래 채취의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골재 개발이나 신규 단지 지정과 같은 대책의 부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 우리와 유사하게 바다모래를 많이 채취한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도 현재는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바다모래 채취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안 마련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바다모래 채취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지정한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서 대응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대체골재의 확보, 경제적 유인책 마련 등의 노력을 통해 바다모래에 대한 의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 격화

### ■ 수산자원의 신란 및 서식지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어업인측의 주장

-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면서 어업 생산량 감소의 원인에 관심이 집중됨
- 국내 건설현장에 필요한 골재의 공급을 위해 바다모래를 대량으로 채취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지속하고자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의 산란장 및 서식장이 파괴되어 어업 생산량이 감소된다는 주장과 함께 대규모 시위와 항의 등 개발 반대 여론이 팽배함

### ■ ‘골재대란’을 피하기 위해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개발수요자 측의 주장

- 건설현장에서의 필수 자재인 모래를 조달하기 위해 남해 EEZ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므로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모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건설업계에서 주장함
-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해 EEZ 모래를 대체하여 서해 EEZ의 모래와 샌드밀(암석분쇄 모래)을 추가 확보하고 있으나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음
-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해 EEZ의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면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은 물론 국책사업도 시행하지 못하는 골재대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 대체 골재자원 확보를 비롯한 명쾌한 해답은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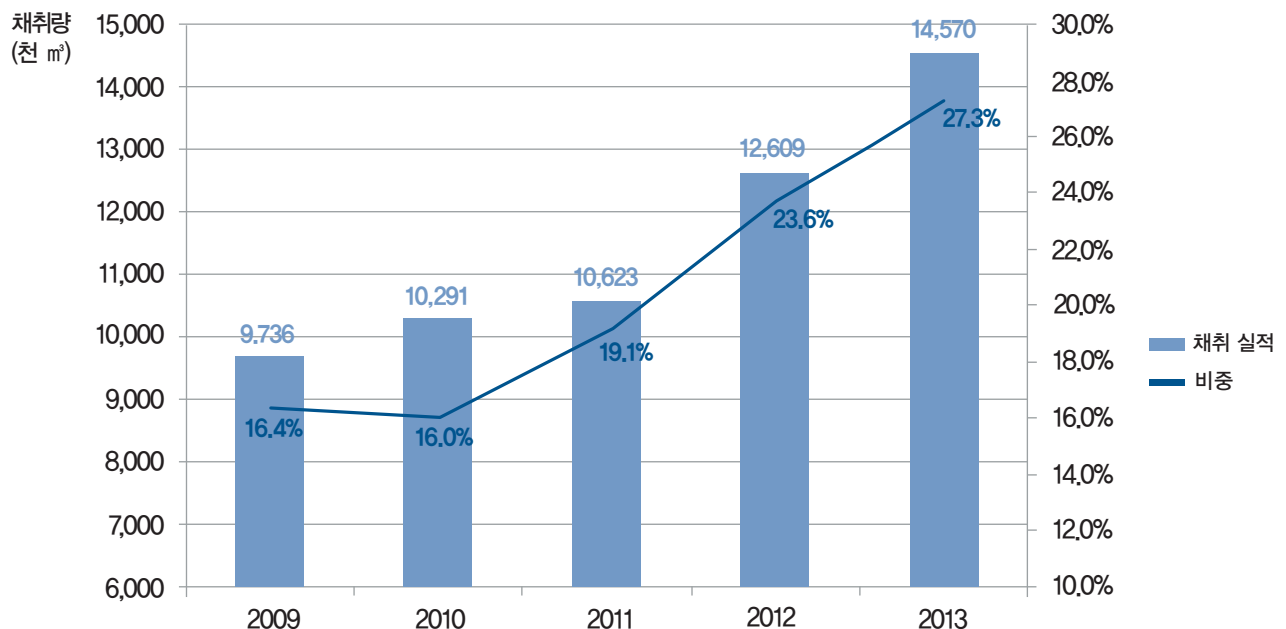
- 남해 EEZ의 모래를 계속 채취한다면 수산자원 감소로 인해 어업인과 국민의 식탁의 안정이 위협받고, 채취를 중단한다면 건설시장의 혼란과 주택공급의 차질 우려가 있음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면서도 예상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여 극한 대치 상황으로 전개됨

## EEZ 바다모래 채취의 과거와 현재

### ■ 주요 골재원으로서 바다모래의 지속적인 공급

- 국내에서는 매년 평균 13,185천m<sup>3</sup>의 골재가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년 20,501천m<sup>3</sup>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sup>1)</sup>
-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 기간 동안, 하천 및 육상모래의 공급은 매년 감소한 반면에 연안 및 EEZ 바다모래는 전체 공급된 모래의 25.4%를 차지함
- 채취된 모래 가운데 EEZ에서 채취된 모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에는 27.3%에 달함

그림 1. EEZ 모래채취 실적 및 비중의 변화



자료 :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13.12), p3~7의 자료로 재구성

### ■ EEZ 골재채취단지의 사용기한 반복적 연장

-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해 '08년에 남해안과 서해안의 EEZ에 각 1개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함
- 당초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였으나 기간 만료 전에 지정기간을 수 차례 연장하면서 EEZ 바다 모래 채취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1)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급실적('09~'13년)과 수요전망('14~'18년)을 기준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최초 지정 당시('08.9)에는 계획총량이 35,200천m<sup>3</sup>을 2년간 채취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채취량을 늘려오고 있음
- 3차 연장기간이 '16년 8월에 종료됨에 따라 '20년까지 4년을 더 연장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임시로 '17년 2월까지 6개월 연장되었고, 그 기간도 종료될 시점에 이르게 됨

표 1.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혁

(단위 : 천m<sup>3</sup>)

구 분	최초지정 ( '08.9)	1차 변경 ( '10.8)	2차 변경 ( '13.1)	3차 변경 ( '15.9)	4차 변경	
					( '16.9)	요구
지정기간	'08.9~'10.8 (2년)	'10.9~'12.12 (2년4월 연장)	'13.1~'15.8 (2년8월 연장)	'15.9~'16.8 (1년 연장)	'16.9~'17.2 (6월 연장)	'16.9~'20.8 (4년 연장)
채취계획량	35,200	35,200	47,150	57,150	60,550	108,277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 지속되는 골재의 수요를 충족할 골재원의 부족으로 EEZ 모래자원의 이용수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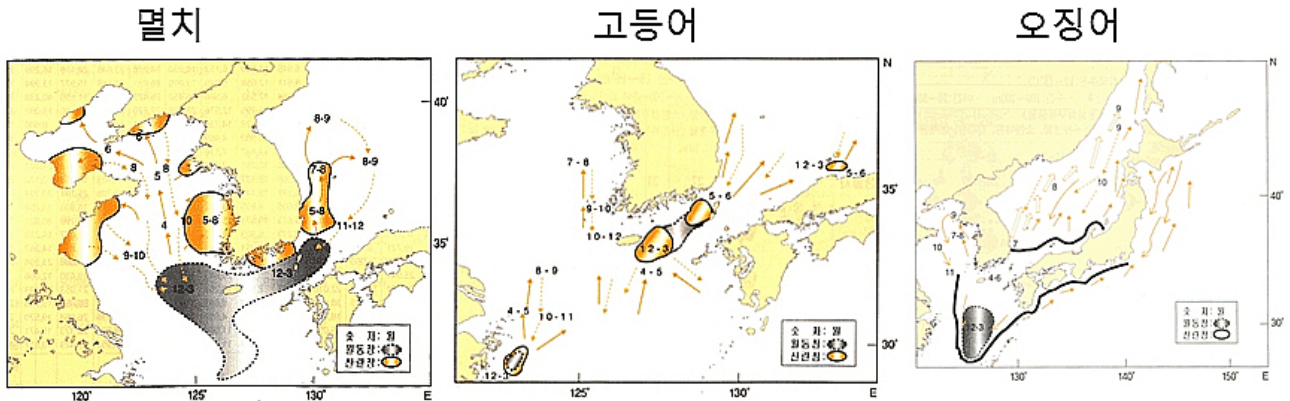
-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 기간('09~'13년)과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 기간('14~'18년)의 골재수요는 각각 매년 1.7%, 1.2%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골재의 추가 확보 필요
- 그러나 다른 골재자원의 고갈과 환경영향으로 인해 하천과 육상, 그리고 연안의 모래 공급이 감소하고 대체 골재개발도 진전이 없어 EEZ의 모래 채취 수요가 더욱 증가함
- 특히, 동남권 지역의 경우, 낙동강의 모래자원이 고갈되면서 하천골재의 공급이 제한되어 남해 EEZ 골재채취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됨

## 수산자원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 ■ 주요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장소를 파헤쳐 모래 채취

-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1~3위인 멸치, 오징어,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생물의 회유경로이면서 산란장 및 월동장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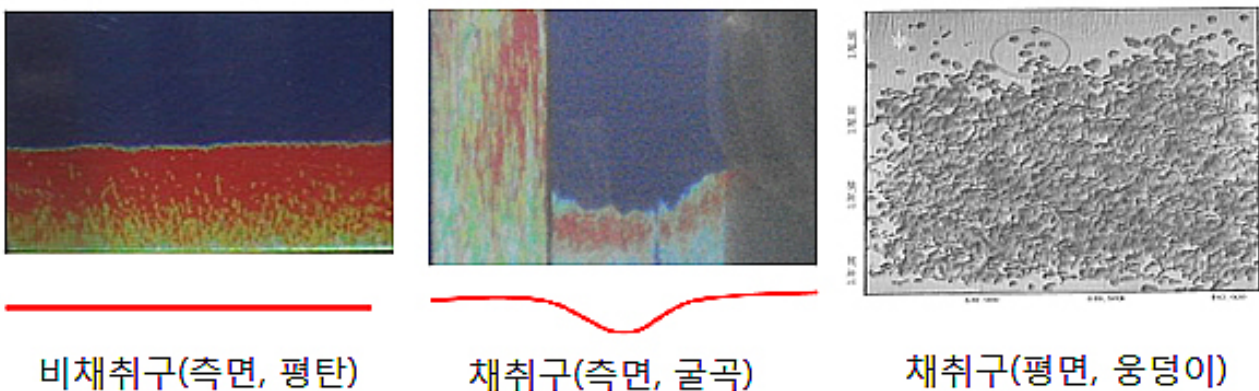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서식 해역



자료 : 국립수산물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ifs.go.kr>)

- 바다모래 채취로 얕게는 5m에서 깊게는 10m 이상의 웅덩이나 골이 만들어져 저서생태계의 파괴 및 어장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웅덩이 부분은 빈산소 상태여서 수산생물이 폐사할 수 있고, 골짜기 형태의 해저에서도 어구 손실 및 어선 사고의 우려가 있음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모래가 채취된 해저는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댐 등으로 강에서의 모래유입이 차단된 현재는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밖에 없음
- 일본 사가현의 경우 모래채취 종료 5년 전과 후의 해저 형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후쿠오카 현 연안의 경우 5m로 파헤쳐진 지형이 채취 종료 20년 후에도 1~4m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

그림 3. 바다모래 채취해역의 해저 지형상태



비채취구(측면, 평탄)

채취구(측면, 굴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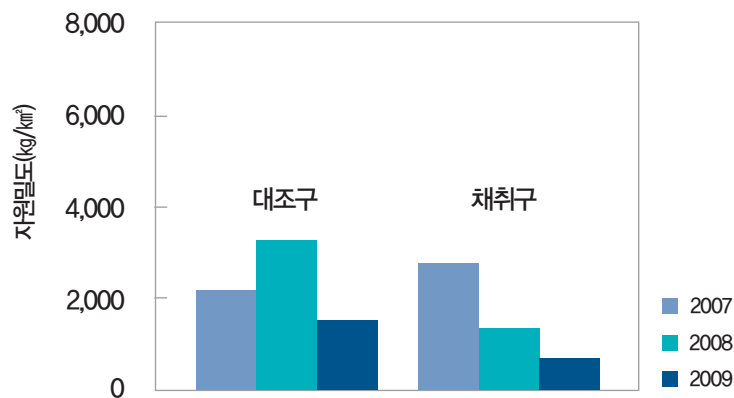
채취구(평면, 웅덩이)

자료 : 국토해양부,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V) - 수산자원분포 및 변동연구”, 국립수산물연구원, 2010, p.101.;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2015, p.3-105.

## ■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수산생물의 회유경로 및 산란·월동장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모래 채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8년을 전후하여 바다모래 채취구 주변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일본의 효고현에서는 채취 후 항구에 야적된 바다모래에서 대량의 까나리가 혼입된 것이 적발되어 해당 현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금지에 대한 기폭제가 되었음<sup>3)</sup>

그림 4. 바다모래 채취구의 자원밀도 변화



주 : 아래의 보고서에서 대조구와 채취구만을 비교함.

자료 : 국토해양부,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VI) - 수산자원분포 및 변동연구”, 국립수산물과학원, 2010, p.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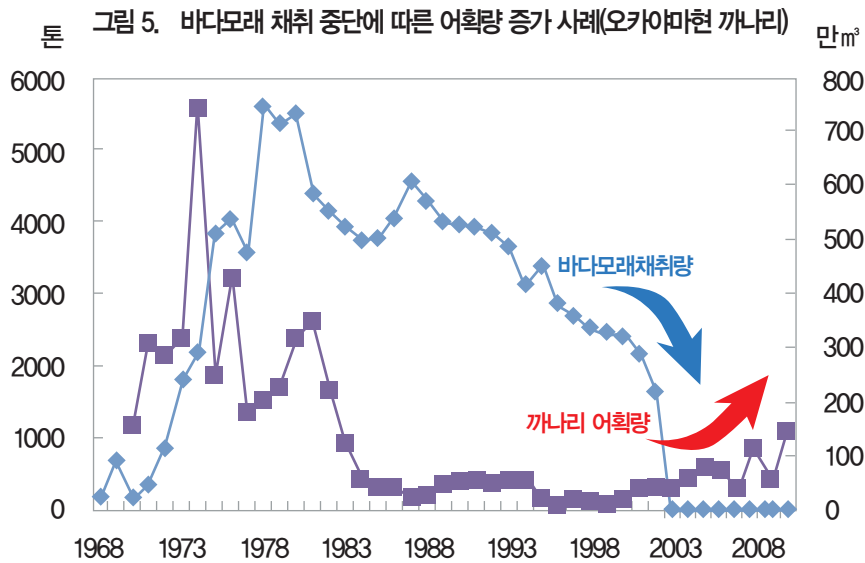
## ■ 어업에 대한 영향은 있으나 피해조사는 매우 제한적

-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주요 수산생물의 회유경로이기 때문에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수많은 어업인이 이용하는 어업의 터전임
- 바다모래 채취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은 대형저인망, 중형저인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어업 등 14종의 근해어업과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등 주요 연안어업이 대부분 해당됨
-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피해는 수산자원 감소, 조업구역 축소, 안전조업 위협 등으로 연근해 어업인의 생계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2) 국토해양부,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VI) - 수산자원분포 및 변동연구”, 국립수산물과학원, 2010, p.165.

3) 東京水産振興会, “日本沿岸域における漁業資源の動向と漁業管理体制の実態調査-平成23年度事業報告-”, 2012, p.89

- 이러한 피해는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기존의 피해조사 보고서가 큰 피해 없음 등으로 결론짓는 경우가 많아 어업인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불신과 반감의 기폭제가 되고 있어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요구됨
- 일본 오카야마현의 경우, 1970년대 바다모래 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의 어획량이 급감하였으나 2003년 4월부터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어획량이 반등하여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및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자료 : 東京水産振興会, “日本沿岸域における漁業資源の動向と漁業管理体制の実態調査—平成23年度事業報告—”, 2012, p.91.

## 골재채취단지 운용의 문제

### ■ 바다모래 채취에 의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훼손의 근거자료 부족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될 무렵에 모래채취로 인한 해당 해역의 환경변화를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초조사가 부실함
- 모래채취기간 중의 환경변화 조사자료 역시 일정기간에만 한정되어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축적된 자료가 부족함
- 모래채취 행위자와 반대자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 논란이 더욱 가중됨

## ■ 골재 공영재의 취지에 역행하는 민수용 채취 증가로 불신 가중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최초 지정당시에 채취한 모래의 용도가 국책사업용에 한정되었지만, 최근까지의 채취실적을 보면 민수용이 87.3%를 차지함<sup>4)</sup>
- 국책사업용 모래채취를 목적으로 지정되었던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가 지정기간을 연장하면서 민수용 모래채취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채취한 모래의 대부분이 민수용으로 이용됨
- 골재로서의 모래 가격은 지역별 운송비 차이 때문에 이용가격의 차이가 많지만, 현재 바다모래 채취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강모래에 비해 바다모래의 가격이 저렴하여<sup>5)</sup> 바다모래의 채취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 채취량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의 제도 개선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2차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12년)에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단지의 이전이나 채취량 축소 등의 노력보다는 지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손쉬운 골재확보 방안을 선택됨
-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기간과 연장기간 명시는 자원의 회복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것임에도 모래 수급 수요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단순히 물량공급 우선으로 단지로 전락되었음

## ■ 채취 반대 사태에 대비하여 대체골재 개발과 같은 사전대책 마련은 소홀

- 골재수급기본계획에서도 줄곧 대체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시적 성과가 전무한 채, 바다모래 채취에만 의존
- 골재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재활용 가능한 골재원의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환경훼손을 방지'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sup>6)</sup>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이 수차례 연장을 거듭할 때마다 채취 반대의 여론이 심화되었지만 대책마련에는 소홀함

## ■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의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

- 골재채취에 따라 해저지형이 급격하게 변화되지만 변화된 해저지형은 원상태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sup>7)</sup>

4) '12~'15년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공급된 남해 EEZ의 모래 공급내역 기준(한국수자원공사,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 2016. 6.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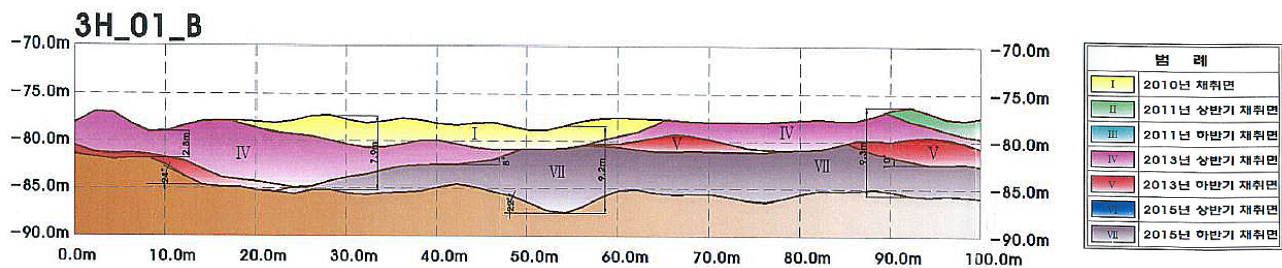
5) 동남권 지역에서 골재 수요가 매우 큰 대도시로서 부산의 시내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강모래는 30,000원/㎡, 바다모래는 25,000원/㎡으로 거래(한국물가협회, 「월간 물가자료」 2016년 12월호, p.103)

6)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 기간의 공급실적과 제5차 기본계획 기간의 공급계획을 볼 때, 선별·파쇄·준설토 등의 재활용 골재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음

7) 국토해양부의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05~'10)'와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연구결과 참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희준 박사는 남해의 퇴적된 모래는 약 1만 5천 년 전의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이며, 모래의 퇴적이 멈춘 상태에서 모래를 준설하면 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일본의 연구결과에서도 바다모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되어 화석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는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견해임<sup>8)</sup>
- 해저지형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채취단지 내 광구별 휴식년제로서는 모래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임

그림 6. 남해 EEZ 골재채취지역 해저지형 변화(일부지역 횡단면도)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본안)」, 2016. 6, p.481

## ■ 비전문조직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관리와 관리 부실

- 골재채취법 제34조의 2에 따라 서해 및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자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정되어 관리 중임
- 한국수자원공사는 육상 수자원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바다골재채취와 관련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이 과다하고, 이러한 분야 사업의 부실로 인한 적자 발생이 조직적인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며, 골재채취단지 관리도 이에 해당됨<sup>9)</sup>
-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에 따라 채취구역의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sup>10)</sup> 복구대책은 명시되지 않아 복구를 위한 실제 노력이 전무함

8) 東京水産振興会, “日本沿岸域における漁業資源の動向と漁業管理体制の実態調査-平成23年度事業報告-”, 2012, pp.87~91.

9) 박원석 국회의원, “수령에 빠진 수자원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자원공사의 해체와 그 대안의 모색 토론회, 2012. 10, pp.21~24.

10)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4조1항 참조

## 바다모래의 지속적인 이용과 현명한 관리대책이 시급

### ■ 외국의 경우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

- 일본은 '90년을 정점으로 바다모래 채취가 줄어들고, 쇄석의 비중이 약 60%로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하였음.
- 영국은 '07년 법률에 기반한 바다모래 채취 가이드라인<sup>11)</sup>을 제정하여 채취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금을 징수하여 피해대책에 활용함
- 네덜란드는 해양준설토와 오염해역의 준설토를 재활용한 골재를 생산하여 건설에 활용함

### ■ 신뢰할 수 있는 모래채취의 영향조사와 이해당사자 참여형 대책 필요

-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상호불신과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환경상태와 향후 변화 예측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
- 이를 통해 과학적 기반의 정확한 조사자료를 확보하여 채취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골재이용자가 부담하고, 조사, 개발, 사후관리 등의 골재채취단지 관리의 단계별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대체골재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바다모래 의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

- 골재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활용 골재원의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골재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함
- 채취로 인해 채취지역 해저지형이 회복불능 상태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골재 수급계획에서 바다모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함
- 우선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모래는 최초 지정당시의 목적대로 국책용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민수용은 금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바다모래 이외 골재확보를 위한 당장의 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지속된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환경피해와 비용발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
-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적정 수준의 부담금 부과 등 바다모래 이용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도 검토가 필요함

11)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Natural Habitats (Extraction of Minerals by Marine Dredging) (England and Northern Ireland Regulations 2007)'에 근거하여 'Marine Mineral Guidance 1: Extraction by dredging from the English seabed'를 제정

## KMI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8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5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URL : <http://www.kmi.re.kr/web/main/web/trebook/list.do?rbsldx=273&page=2>